

“깜깜이 청문” vs “망신주기”...박영선 자료제출 격렬 공방

행안·과기·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진영 후보자, 정치적 소신·부동산 투기 의혹 여야 설전
조동호 후보자, 과다한 해외 출장·아들 호화 유학 질타

국회는 27일 상임위별 인사청문회를 열어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수행력을 검증했다.

◆진영 후보자=행정안전부의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여야는 진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박근혜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올랐다가 사퇴하고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진 후보자의 '정체성'을 따져붙였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적을 옮겼는데 본인의 정체성이 더불어민주당에 맞느냐. 그럼 그 이전 3선을 하는 동안은 한국당 소속이었는데 정체성이 안 맞았느냐"며 "결과적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 당적을 옮긴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6개월 장관을 하고 기초연금 갈등으로 그만뒀다. 이 정부와 유사한 갈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진 후보자를 '소신의 정치인', '행정안전 전문가'로 치켜세우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여야를 떠나 흠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번 7명 입각 인사 중 제일 결점 없는 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

에서) 복지부 장관을 그만둘 때 아주 지사적인 소신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다. 존경한다. 이번에도 소신껏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대통령이 캠프에 참여한 사람 등을 임명하면 '코드 인사'라고 하고 진 후보자처럼 정치 철학이 조금 다른 면도 있고 일치하는 면도 있어 '통합형 인사'인 사람은 안 맞는 인사라고 하는데 뭘 해도 비판적인 것 같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진 후보자의 용산과 강남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강남 고급 아파트 입주 1년만에 17억대 시세차익을 봤고, 용산공원 인근 분양권 등으로 시세차익을 16억원 받았다"며 "2014년 매입한 땅은 용산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돼 가치가 확 올랐는데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으니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동호 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조 후보자의 외유출장 의혹과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조 후보자가 해외출장 간 곳이 강남과 강남이 유학한 곳과 매우 일치

한다"며 "장남의 입학식과 졸업식에도 가지 않았다. 7년 출장에 5000만원 가까이 지출했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KAIST에서의 공무 출장과 관련, 장남-차남 졸업식에 맞춰 인근에 출장을 가는 등 적정성 문제가 있다"며 "또 10년간 43차례 출장을 갔는데 학교에 제출한 보고서 상 참석 행사 개최 날짜가 실제와 다르거나 해당 행사가 아예 없었던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장관 후보자의 의도적으로 허위 해외출장 보고서를 제출했다면 장관은 커녕 교수 자격도 없다"며 "만약 조금이라도 허위가 있다면 자진사퇴 하시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자 아들의 호화유학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아들의 초호화 유학을 위해 7년 동안 7억원을 송금했는데 한 해 연봉을 아들 유학비로 다 바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들은 포르쉐 등 좋은 차를 타고, 월세 240만원 짜리 아파트에 살고있다"고 꼬집었다.

◆박영선 후보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의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야는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미흡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조세금탈루, 장남 이중국적, 불법주차 과태료 면제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는 문구까지 붙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 낭독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는 세금 지각 납부, 장남의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재산 축소신고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을 청문회 하루 전인 오늘까지 거부하고 있다"면서 각 좌석 앞에 비판 문구를 세워놓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무리한 제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제로페이와 최저임금 등 정책질문에 집중했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자료 요청을 해도 '개인정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발뺌하고 있다"며 "과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40번 하면서 '자료 없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이훈 의원은 "근거 없는 가

짜뉴스에 기반한 자료제출 요구가 난무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이 사실인 양 보도되는데 후보자가 그것을 감내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고 맞대응했다. 이어 "자료제출이 거부된 것 중에는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다"며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병원이 어디인지가 왜 궁금한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살릴 역할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이견으로 회의를 열지 못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연기했다.

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 안전 상정에 반대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신보라 의원 “젓먹이 아들과 등원 하겠다”...국회의장 고심

의장에 동반 출석 요청

교섭단체와 논의 결정키로

지난해 9월 출산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광주 동진여교 출)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영아 자녀와의 동반 출석을 국회의장에 요청,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자신의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밖

에 의한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국회의장의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활용, 문 의장에게 자녀의 출입 허가를 요청한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출산을 앞두고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석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의 요청에 문 의장은 허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신 의원이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을 요청한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장,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서 자녀

동반 출석을 허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 국회법에 따른 의장 허가도 지금까지 제한적인 형태로 이뤄졌다. 외국인의 국가 원수나 의외 의장의 방문시에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문 의장은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의장 단독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교섭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교섭단체 간 논의를 해결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자녀 동반 출석을 허용한 사례와 불허한 사례가 혼재한다. 미국 상원과 호주 상원, 뉴질랜드 의회에서는 어린이의 본회의장 동반 출석을 허용한 반면 덴마크와 일본 시의회는 이를 불허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숙 전 대사·안병욱 전 차관
미세먼지 추진단 공동단장

정와대는 26일 김숙 전 유엔대사와 현 정부 초대 환경부 차관을 지낸 안병욱 전 차관을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 기구 구성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대사와 안 전 차관은 다음 달 1일 환경부 산하에 설립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 설립추진단'의 공동단장을 맡게 된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전 대사는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제적 환경 회의의 실무협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등 다자 간 협력·협상의 전문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안 전 차관은 기후변화·미세먼지 전문가로,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설립추진단은 범국가 기구의 설립규정 제정과 위원 후보자 발굴 및 인사검증 지원, 예산 편성 및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짜질’ 발언 이연주 의원 징계 착수

바른미래 당원들 제소 수용

바른미래당은 27일 경남 창원형사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에게 "짜질하다"고 표현한 이연주 의원의 징계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원외 지역위원장과 당원들로부터 해당행위로 제소 당했다.

송태호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당에서 여론이 비등하니까 (징계) 논의를 해보려 한다"며 "그동안 누적이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손 대표가 창원에서 속삭이는 것을 보면 정말 짜질하다", "안전회 백장하다"와 같은 주장을 했다. 또 창원형사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을 두고, "창원 같은 경우는 심판선거를 해야 해서 거기에 힘을 보태야 하는데 몇 퍼센트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휘방 놓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남 당 소속 일부 의원은 이 의원의 독설을 "해당행위"라고 규정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당도 이례적으로 공식 논평을 내 이 의원 발언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원외 지역위원장 및 당원들도 이날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며 "이 의원은 패륜적 행위로 대한민국 정치를 흉탕물로 만드는 미꾸라지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 대표에 대한 이 의원의 반복되는 인격 모독과 비하 발언, 당에 대한 음해는 배려와 포용심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 의원은 손 대표와 당원, 국민 앞에 배배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행위를 한 이 의원을 어제 저녁 윤리위에 제소했다"며 "이 의원이 직전에 나간 장소(손 대표)에게 뒤에서 칼을 찌는 행위를 했는데 아주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갈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